

 금융위원회	<h1>보 도 자 료</h1>			
책 임 자	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 고 상 범(02-2100-2660)		담 당 자	노 소 영 사무관 (02-2100-2662)
	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장 이 수 영(02-2100-2510)			김 기 태 사무관 (02-2100-2523)
	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장 여 성 철(044-202-7554)			민 광 제 사무관 (044-202-7557)
	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 김 영 노(044-215-4210)			최 중 호 사무관 (044-215-4215)
	기획재정부 인구경제과장 김 영 민(044-215-4551)			고 영 옥 사무관 (044-215-8571)
	금융감독원 연금금융실장 박 학 순(02-3145-5180)			권 성 훈 팀 장 (02-3145-5199)
	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장 박 형 규(051-663-8471)			하 철 훈 팀 장 (051-663-8472)

## 제 목 :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「인구정책 TF」 논의 결과

- ◇ 주택을 보유한 고령층이 안정적 현금흐름을 얻을 수 있도록 **주택연금 가입문턱을 낮추고 月지급금액 확대 등 연금의 보장성도 강화**
- ◇ **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고 개인연금 가입을 지원하는 한편, 퇴직개인연금 수익률을 높여 청장년층의 노후대비 자산형성을 뒷받침**

- 범부처 인구정책 TF는 11.13일(수)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하여 ‘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안’ 중 세 번째 전략인 ‘고령인구 증가 대응방안’을 확정·발표

※ '19.11.13. 기재부 보도자료 "범정부 「인구정책TF」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(Ⅲ) 발표"

- 동 방안에는 국민의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①주택연금 활성화 및 ②퇴직·개인연금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방안이 포함

### < 주요 경과 >

- ▶ '19.4월, 인구구조 변화가 고용·복지·교육·산업구조 등 각 분야별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인구정책 TF 출범(기재부 주관)
- ▶ '19.4~6월 중 인구정책 TF의 분야별 10개 작업반 중 금융반 과제로 ①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및 ②퇴직·개인연금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방안 논의

\* (금융반 구성) 금융위, 고용부, 기재부, 금감원, 금융연 등

※ '19.3.28. 기재부 보도자료 "인구구조변화에 따른 범부처 대응노력 강화" 참조

- 우리나라는 **全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\***이나, **국민들의 노후준비는 미흡한 상황**

\* '18년 고령사회(65세↑ 고령인구 14% 이상) 진입 → '25년 초고령사회(고령인구 20% 이상) 예상

- 최근 설문조사 결과\*('18년 통계청)에 따르면, **국민의 50% 이상은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음**

\* 노후준비상황 : 아주 잘됨 1.7% 잘됨 8.1% 보통 36.5% **안함 35.7% 전혀 안함 18.1%**

- 우리나라 연금의 **소득대체율\***은 **39.3%**('17년, OECD)에 불과하여 OECD 권고수준인 70~80%에 크게 미달

\* 은퇴 전 소득 대비 은퇴 후 연금소득의 비율

- 실제로 국민 보유자산의 **70% 이상**이 부동산에 집중\*되어 노후 현금 흐름 창출이 어렵고, 국민연금을 보완해야 할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도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

\* 보유자산 중 부동산을 포함한 실물자산(비금융자산) 비중  
: **한국 74.4%**, 미국 30.5%, 일본 37.8%, 영국 47.2%, EU 58.0%

- 주택연금 가입률은 **1.5%**('18년)로 주요국 대비 낮지는 않은 수준\*이나, 국민 노후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**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**

\* 주택연금 가입률: (한국) 1.5% (미국) 1.9% (홍콩) 0.5% (일본) 0.1% 미만

- 퇴직연금·개인연금의 경우, 낮은 가입률\* 속에 주로 예·적금 등으로 운용되면서 **저조한 수익률\*\***을 시현 중

\* 가입률(%) : 퇴직연금 50.2%('17), 개인연금 12.6%('17)

\*\* 최근 5년('14~'18) 수익률 : 퇴직연금 1.88%, 개인연금 2.53%

- 이에 따라, **국민의 노후자산 형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**

-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고령층에 대해서는 주택연금을 통해 노후 보장에 충분한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,
- 청·장년층의 경우에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통해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

## ① [가입대상 확대] 가입연령, 주택가격과 주택요건 등을 확대하겠습니다.

- ① (가입연령) 60세 이상 → 55세 이상(부부 중 연장자)으로 확대
- ② (주택가격) 시가 9억원 → 공시가격 9억원으로 합리화
  - 주택가격 9억원 초과시의 지급액은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제한
  - ※ 관련 주금공법 개정안(최재성·강효상 의원안) 既발의
- ③ (주택요건) '전세를 준 단독·다가구주택'\* 및 '주거용 오피스텔'\*\*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토록 개선

\* [현행] 주금공이 주택에 저당권 설정만 가능(소유권은 가입자 유지) →

[개선] 주택 소유권을 주금공으로 이전하고 가입자는 연금수급권 취득하는 형태도 가능

\*\* 주택법상 '주택' 및 '노인복지주택(실버타운)만 가입가능 → 주거목적 사용되는 '오피스텔'도 포함

※ 관련 주금공법 개정안(심상정 의원안) 既발의

※ 국회 관련논의(주택가격 상한 폐지,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)에 적극 참여

## ② [보장성 강화] 취약 고령층에 대한 주택연금 지급액을 확대하고, 배우자 수급권을 강화하겠습니다.

- ① 취약고령층의 주택연금 지급액 확대(지급 확대율 최대 13% → 최대 20%)
  - 주연보 보증재원 확대\* 등으로 마련된 보증여력을 활용하여 취약 고령층(1.5억원 이하 주택 & 기초연금수급자)에 대한 주택연금 지급액 확대
  - \* 주신보 여유재원의 일부를 주연보로 이전('19.9.1일 주금공법 시행규칙 개정)

【 저소득 고령층의 지급금 확대(예시) 】

구분(월간지급액, 만원)	65세	75세	85세
일반형	26.6	41.3	70.7
우대형(현행, 우대율 13%)	29.0	45.5	79.6
개선(개선, 우대율 20%)	30.5	48.0	84.6
증가액 (증가율)	1.5 (+5.2%)	2.5 (+5.5%)	5.0 (+7.0%)

\* 주택가격 1.1억원(우대형 가입자의 평균 주택가격) 가입자 기준

- ② 가입자가 생전에 수익자로 지정한 자(배우자)가 수급권을 취득하는 신탁(유언대용신탁)을 활용하여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에 연금 자동승계\*

\* 현재는 가입자 사망시 자녀들의 동의가 없으면 배우자로 연금이 승계되지 않음

**③ [유휴주택 활용] 공실 임대를 허용하여 고령층 가입자에게는 추가 수익을 제공하고, 청년 등에게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.**

**① 공실이 발생하는 주택\***은 청년·신혼부부 등의 임대주택으로 활용  
(서울시·SH공사 협약을 통해 서울시에서 우선 시행)

\* 단, 가입주택 전부임대는 입원 등 가입자의 불가피한 사정에 한함(장기 거주안정)  
☞ 병원, 요양(시설)소 등 입원, 다른 주택 장기체류(자녀봉양), 격리 등

- 가입자는 기존 주택연금 수령액 **외 추가수익을 확보**하고,

- 청년·신혼부부\* 등은 시세보다 **저렴한 가격**(시세 80% 수준)으로 안정적으로 임대·거주 (서울시·SH공사와 협업)

\* 부부합산 소득이 월평균 도시근로자 소득 120% 이내인 무주택가구 중 SH공사 선정

**【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활용한 임대활용방식(예) 】**

구분	내용	예시 (전용 59㎡, 매매 3억원, 전세 1.7억원)
주택연금 가입자*	· 임대료 일부 추가지급	주택연금 외에 매월 25만원
청년·신혼부부	· 시세의 80% 가격	보증금 68백만원 월세 27만원
SH공사(서울시)	· 임대료 일부를 관리비 활용 (사후관리)	시설관리 및 임대주택 공실관리 등

\* 향후 시가 9억원 이상 주택의 임대허용 시 추가수입은 일정수준으로 제한 검토

**② 향후 신탁방식(소유권 주금공 이전) 주택연금 도입시 천국을 대상으로 임대범위(신혼부부→일반임차인) 확대하여 시행**

\* (1차: 금번 개선사항) SH공사를 통한 전대방식의 임대를 허용(서울시) →  
(2차: 신탁방식 도입) 주금공이 직접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맺는 방식 도입

**< 세부과제별 추진일정 >**

세부과제	시 기	조치사항 (소관)
• 가입연령 하향조정(60→55세)	'19.4분기~	주금공법 시행령 개정 (금융위)
• 가입주택 가격상한 현실화 (시가 9억원→공시가격 9억원)		주금공법 개정 추진 (금융위)
• 일부전세가구 가입허용, 배우자 자동승계 등(신탁방식 도입)		
• 가입주택 임대범위 확대 등 임대 수익 제공방안 마련	'19.4분기~	주금공·SH 협약 (주금공) 주금공법 개정 추진(금융위)

### ① [연금성 강화]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의무화하고, 장기간에 걸쳐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.

※ (현행) 퇴직연금 가입자는 전체 가입대상 근로자의 50.2% 수준('17년), 일시금이 아닌 연금수령 비중은 1.9%('17년, 계좌수 기준)에 불과

#### ①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법안\*의 신속한 국회통과 지원

\*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("퇴직급여법") 개정안 既발의(한정애·임이자·김동철 의원안)

- 일정규모 이상 기업부터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 의무화(퇴직금 폐지)

#### ② 중소·영세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\* 도입

\* 영세사업장들이 개별 납부하는 적립금을 기금화(pooling)하여 운용, 재정지원 병행

※ 관련 퇴직급여법 개정안 既발의(한정애·임이자·김동철 의원안)

#### ③ 퇴직급여를 장기에 걸쳐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세제혜택 확대

- 연금 수령기간이 10년을 초과할 경우, 적용되는 연금소득세율을 하향 조정 (퇴직소득세의 70% → 60%)

### ② [수익률 제고] 규모의 경제와 분산투자를 실현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운용방식을 다양화하여 선택권을 확대하겠습니다.

※ 최근 5년('14~'18)간 수익률 1.88% (원리금보장상품 투자비중이 약 90% 수준)

#### ① (일임형) 전문성 있는 금융회사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권한을 위임 받아 “알아서 연금을 굴려주는” 일임형 제도 도입(DB형)

#### ② (사전지정운용) 가입자가 상품을 선택 않는 경우 “사용자가 사전에 지정한 적격상품(디폴트옵션)”에 자동 가입되는 제도 도입(DC형)

#### ③ (기금형)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“수탁법인”을 설립 하고, 동 수탁법인이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(DB, DC형)

※ 관련 퇴직급여법 既발의 : 김태년 의원안(일임형·사전지정운용), 한정애 의원안(기금형)

### ③ [운용책임 강화] 퇴직연금 운용에 대한 퇴직연금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.

※ 현재 적립금 규모에 연동된 수수료 구조 → 수익률 등 운용성과 제고 유인 부족

\* 퇴직연금 수익률(%) : ('15) 2.15 → ('16) 1.58 → ('17) 1.88 → ('18) 1.01  
퇴직연금 수수료율(%) : ('15) 0.49 → ('16) 0.45 → ('17) 0.45 → ('18) 0.47

- ①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과 성과(수익률) 등에 따라 수수료가 정해질 수 있도록 수수료 산정체계 개선

※ 관련 퇴직급여법 개정안(김태년 의원안) 既발의

- ② 신설되는 사전지정운용(디폴트옵션) 상품 등의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자기자본 투자 유도

### ④ [선택권 강화] 가입자가 손쉽게 연금상품과 연금사업자를 선택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.

- ① 가입자가 온라인을 통해 수익률을 비교(DB형·DC형·개인형 IRP)하고, 사업자·상품을 원스톱으로 변경(개인형 IRP)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프라(정보공시·계좌이동) 구축 → 통합연금포털\* 전면개편 추진

\* '15.6월부터 '통합연금포털'을 통해 공·사연금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, 현재는 그 기능이 '단순조회'에 머물고 있는 상황

- ② 일정규모 이상 DB형 도입 기업에는 적립금운용계획서(IPS) 의무화

※ 관련 퇴직급여법 개정안(한정애·김동철 의원안) 既발의

- ③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기관\*도 일정 요건을 갖추어 경우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사업자 범위 확대 추진

\* 퇴직연금사업자 업무 중 운용관리 업무 수행(자산보관은 금융회사에 위탁)

#### < 세부과제별 추진일정 >

세부과제	시 기	조치사항 (소관)
• 퇴직연금 단계적 도입 의무화 등 연금성 강화	'19.4분기~	퇴직급여법 개정 추진 (고용부)
• 퇴직연금 장기수령 유도(수령기간 10년 초과시 세제혜택 확대)	'19.4분기	소득세법 개정 (기재부)
• 일임형 제도, 디폴트 옵션, 기금형 제도 도입	'19.4분기~	퇴직급여법 개정 추진 (고용부)
• 연금사업자의 책임성 강화		
• 연금상품 선택·이동 인프라 구축	'19.4분기	통합연금포털 개편 (금감원)
• 퇴직연금사업자 범위 확대 추진	'20.1분기~	퇴직급여법 개정 추진(고용부)



### ① [가입률 제고] 세대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청년층과 장년층의 개인연금 가입을 유도하겠습니다.

※ 현재 개인연금 가입률은 12.6%('17년)에 불과

- ① (청·장년층) ISA(개인종합자산관리) 계좌의 만기(5년) 도래시, 계좌금액 내에서 개인연금 추가불입을 허용<sup>1</sup> 하고, 세제혜택<sup>2</sup> 부여

1) 연금계좌 불입한도 : 연 1,800만원 → 연 1,800만원 + ISA 만기 계좌금액

2) 추가 불입액의 10%(300만원 한도) 세액공제(추가불입 당해연도만 적용)

- ② (장년층) 50세 이상 장년층의 개인연금(IRP 포함) 세액공제 한도를 연 200만원 확대\*(3년 한시운영, 고소득자 제외)

\* 400만원(IRP 합산시 700만원) → 600만원(IRP 합산시 900만원)

### ② [수익률 제고] 퇴직연금과 유사하게 전문가가 개인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, 시장경쟁을 촉진하여 수익률 제고를 유도하겠습니다.

※ 최근 5년('14~'18)간 개인연금 수익률은 2.53% 수준

- 퇴직연금과 유사하게 전문가에 의한 분산투자 등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, 자유로운 연금상품 선택·이동권 보장

- ① 전문성 있는 금융회사가 가입자의 개인연금 운용권한을 위임받아 “알아서 연금을 굴러주는” 일임형 제도 도입

※ 개인연금은 가입자가 가입에 대한 의사결정 및 운용 권한을 가지므로 퇴직연금에 도입하는 디폴트 옵션 및 기금형 제도를 도입하지 않음

- ② 가입자가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수익률을 비교하고, 사업자·상품을 원스톱으로 변경할 수 있는 인프라(정보공시·계좌이동) 구축

#### < 세부과제별 추진일정 >

세부과제	시 기	조치사항 (소관)
• 가입시 세대별 맞춤형 지원 (ISA-연금 전환 허용, 50세 이상 세액공제 한도 확대)	'19.4분기	조특법, 소득세법 개정 (기재부)
• 연금상품 선택·이동 인프라 구축	'19.4분기	통합연금포털 개편 (금감원)

## 참고 1

## 주택연금 활성화에 따른 기대효과

◇ 주택연금 가입대상자의 연령완화 및 주택가격제한 합리화 등 가입요건을 개선하여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(약 135만 가구)

수혜 계층(예시)

현 행 (As-is)

개 선 (To-be)

### ① 만 60세 미만 베이비부머 세대도 주택연금 가입가능

나이가 만 58세,  
만 54세인  
A부부

"일찍이 퇴직하게 되어  
마땅한 소득원이 없는데,  
주택연금은 만 60세  
이상만 가입할 수  
있더라구요. 돈 들어갈  
일이 많은데 걱정입니다."

· 주택연금 가입가능 연령을  
"연장자 기준 만 60세에서  
**만 55세로 완화**"  
\* 3억원 주택, 55세 가입자는  
월 46만원의 주택연금을  
수령할 수 있음

### ② 가입주택 가격조건을 시가 9억원 → 공시가격 9억원으로 합리화

주택가격(시가)  
10억원인 집에  
살고 있는  
B부부

"10년 전 주택구입 후  
주택가격이 상승하여  
시가가 9억원을 조금  
넘었는데, 주택연금 가입이  
불가능하더라구요.  
집 한 채가 전 재산인데  
걱정입니다."

· 가입주택의 가격기준을  
**공시가격 9억원으로**  
합리화  
\* 최대 연금지급액은 9억원  
기준으로 제한하여  
연금건전성을 유지

### ③ 단독·다가구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

단독주택에  
살면서  
2층에는 전세를  
내어준 C노부부

"저희 집 2층에 빈 공간이  
있어 전세를 내 주었는데,  
이것 때문에 주택연금  
가입이 어렵다고 합니다.  
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 
있는 방법이 없나요?"

· 일부 공간에 대해 전세를  
준 **단독·다가구 주택**  
**소유자도 주택연금 가입** 가능  
\* 주택연금 가입주택에  
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에서  
가입주택 소유권을  
주금공으로 이전하도록 개선



◆ 주택연금 자동승계, 월지급액 확대를 추진하고, 가입주택의 임대를 허용하여 연금의 안정적 수급 및 소득보장 강화 지원

수혜 계층(예시)

현 행 (As-is)

개 선 (To-be)

① 저소득·저가주택 보유 고령층에 대한 연금지급액 확대

주택가격 1.1억원  
저가주택 보유  
E부부

“전 재산이 1.1억원 주택 한 채  
뿐인데, 우대형 주택연금을  
이용하여도 연금액이 너무  
작습니다.”

· 주택연금 가입 서민층의  
월지급액을 확대

\* 75세, 1.1억원 주택 가입자  
月 45만원 → 48만원 수령

② 배우자 연금 수급권 보장

자녀와  
상속분쟁이  
예상되는  
F부부

“남편이 사망한 후  
자녀와의 상속문제로  
주택연금이 끊길까봐  
걱정됩니다.”

· 연금수급권을 배우자로  
자동승계하여 수급권을 보장

③ 연금가입 주택의 임대주택 활용

가입주택에  
살지 못하게  
되거나,  
빈방이 있는  
가입자

“요양원에 들어가게 되어  
연금가입주택에 살지  
못하게 되었습니다. 이  
주택을 활용하면 좋을 것  
같은데, 어떻게 하면  
좋을까요?”

·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 
임대주택 활용

- 주택연금 가입자는  
연금액 外 임대수익 확보
- 청년·신혼부부는 저렴한  
주거공간을 확보

## 참고 2

## 퇴직·개인연금 제도 개선에 따른 기대효과

◇ 세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세제혜택을 통해 연금 가입률을 제고하고, 일시금이 아닌 연금수령을 유도

수혜 계층(예시)

현 행 (As-is)

개 선 (To-be)

### ① ISA계좌 적립금의 연금화 유도

35세  
자영업자 B씨

"5년 동안 ISA 계좌에  
목돈을 모아놓긴 했는데  
연금계좌에는 연  
1,800만원까지만 넣을 수  
있더라구요..  
여태까지 모은 돈으로  
노후대비를 해놓고 싶은데  
그냥 다른 금융상품에  
투자해야 하는 걸까요?"

#### ISA계좌의 연금화 허용

- ISA 만기시 계좌금액  
범위 내에서 연금계좌  
추가불입\* 허용
- \* 불입한도 : 연 1,800만원 →  
연 1,800만 + ISA 만기금액
- 추가불입액에 비례\*하여  
세액공제 혜택 적용

\* 추가불입액의 10%(300만원 한도)

### ② 50세 이상 세액공제 한도 확대

50세  
회사원 C씨

"은퇴가 얼마 남지  
않았는데 세제혜택이  
좀 더 있으면 연금  
가입금액을 좀 더 늘리고  
싶습니다."

· 은퇴를 앞둔 50세 이상의  
연금 세액공제 한도 확대  
(200만원 상향, 3년 한시)

- 연 400만원  
(IRP 포함 700만원)
- 연 600만원  
(IRP 포함 900만원)

### ③ 장기 연금수령 유도

70세  
은퇴자 D씨

"퇴직연금은 장기에 걸쳐  
수령해도 혜택이 없나요?"

\* 개인연금의 경우 현재  
수령연령이 증가할수록  
낮은 세율 적용

· 퇴직연금 수령기간이  
10년 초과시 세율 완화

- 연금소득세 :  
퇴직소득세의 70% →  
(10년 초과시) 60%

◇ “규모의 경제 + 분산투자”를 통해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, 연금 운용기관의 책임성 강화

수혜 계층(예시)	현 행 (As-is)	개 선 (To-be)
<b>① 일임형 퇴직·개인연금 제도 도입</b>		
DB형 도입 기업 /개인연금 가입자	“수익률에 관심이 많아서 연금펀드도 가입했는데 <b>상황변화에 따른 리밸런싱이 쉽지 않네요.</b> 전문가가 알아서 굴려주는 연금상품은 없나요?”	· <b>일임형 퇴직·개인연금</b> 도입 - 전문성 있는 금융회사가 사용자·가입자를 대신해 “ <b>알아서 연금을 굴려주는</b> ” 상품
<b>② 디폴트 옵션 제도 도입</b>		
DC형 퇴직연금 가입자	“DC형 퇴직연금은 개인이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던데 제가 금융상품은 잘 몰라서.. 예금금리도 너무 낮고 고민이네요.”	· <b>디폴트 옵션</b> 제도 도입 - 가입자가 일정기간 상품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지정된 <b>적격투자 상품에 자동가입</b> 되는 제도
<b>③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</b>		
퇴직연금 제도 도입 기업 및 가입자	“퇴직연금을 예·적금으로만 운용한 결과 1%대 수익률이네요.. 임금상승률에도 못 미쳐서 차액만큼을 손실로 처리했습니다.”	· <b>기금형 퇴직연금</b> 제도 도입 - <b>사용자(기업), 근로자, 자산 운용전문가</b> 등이 참여하는 기금에서 주요 의사결정을 하고 운용시 전문성도 제고
<b>④ 금융회사의 연금 운용성과에 대한 책임성 강화</b>		
DB/DC/IRP형 도입 기업 및 가입자 /개인연금 가입자	“연금 수익률이 1%대밖에 안되면서 수수료만 많이 떼가는데, 운용하는 금융회사는 아무 책임도 안지나요?”	· <b>금융회사 책임성 강화</b> - <b>서비스·성과(수익률)</b> 에 기반한 수수료 체계 개편 - 자기자본 투자 유도

◇ 연금 가입자의 자유로운 연금상품 선택 및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

수혜 계층(예시)

현 행 (As-is)

개 선 (To-be)

① 정보공시 강화 및 연금계좌 이동 인프라 구축

퇴직.개인연금  
가입을 고민  
중인 회사원  
A씨

“개인연금 가입하려고  
알아봤더니 상품이 너무  
많아 선택이 어렵네요..  
수익률을 한눈에 비교해  
볼 수는 없나요?”

· **연금정보 공시 시스템**  
개편  
- 각 업권별 연금상품  
수익률·수수료 정보를  
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 
**통합연금포털 전면개편**

IRP 가입  
중이나,  
수익률이 낮아  
고민 중인  
자영업자 B씨

“주거래은행에서 추천받은  
IRP 상품 수익률이 너무  
저조하네요.. 다른 상품으로  
갈아타야지 생각은 하는데  
바쁘고 번거로워서..”

· **One-stop 계좌이동 서비스**  
-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에서  
①관련서류 별도발급없이  
②한번에 다른 사업자의  
**연금계좌로 on-line상 이동**

② DB형 퇴직연금에 대한 신뢰 제고장치 마련

DB형  
퇴직연금을  
도입한 기업

“우리 기업은 퇴직연금  
적립금에 대한 구체적인  
운용목표와 계획이  
없습니다. 담당자  
재량으로만 운용하고  
있는데 손실이 크게  
날까봐 걱정이 되네요.”

· **DB형 퇴직연금에 대한 IPS  
도입 의무화**  
- 퇴직연금 운용 목표수익률,  
자산배분전략 등 명시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 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 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 변 인  
[prfsc@korea.kr](mailto:prfsc@korea.kr)

